

野, 전대서 총선 경선룰까지 바꾸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

전준위, 60% 상향 방안에

非盧측 강력 반발... 결정 미뤄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이 총반전에 진입한 가운데 총선 후보 경선 룰 개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선 방법 개정이 특정 계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4월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26일 새정치연합 전준위(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전제회의를 열고 총선 후보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6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준위의 이같은 방안은 '국민참여 경선'에서 선거인단 구성은 당원을 100분

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현행 당규에 비해 일반 국민 비율이 10% 포인트 높다. 이를 두고 당 내외에서는 외곽 조직력이 강한 친노(친 노무현) 진영 등 특정 계파에 유리한 룰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구성된 전준위가 민감한 총선 룰을 건드리는 게 부적절하고,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노 성향 당권 및 최고위원 주자들은 친노·주류 측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 중도 성향 주자들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노 성향의 최고위원 후보인 주승용 의원은 최근 "특정 당원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국민 선거인단 규모를 상향할 경우 특정 계파 후보들이 동원 경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압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도 성향의 최고위원 주자인 전병헌 의

원도 "지금 전대준비위에서 공천 룰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대가 끝나면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공천 룰 개정을 위한 소위를 만들어서 4월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준위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준위의 개정이 정치적신실천위에서 제시한 '70(일반 국민) 대 30(권리당원)' 방안보다 당원 비중을 높인 것이며 지도부의 공천 전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순순한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준위는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다시 개최, 의견을 모아 29일 중앙위원회와의 연설회에서 당내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전제회의와 중앙위 연설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룬다면 30일 전제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4일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심 공략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후보들이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서울시 당대표·최고위원 및 시당위원장 후보간담회에 참석해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 /연합뉴스

박지원, 대의원·권리당원 여론조사서 문재인 앞서

차측 "文대세론 무너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지원 의원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부분에서 문재인 의원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새정치연합 대의원 985명과 권리당원 1018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우선 박 의원은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1.5%

의 지지를 얻어 31.9%에 그친 문 의원을 19.6%포인트 앞섰다. 이인영 의원은 12.0%였다.

지역별로는 박 의원이 서울, 경기·인천, 호남, 강원·제주에서, 문 의원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각각 앞서며 대전·충청에서는 조박빙 양상을 보였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같은 기관의 3차례 조사에서 31.1%→43.3%→51.5%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문 의원은 24.4%→37.5%→31.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권리당원 조사에서도 47.7%를 기록해 문재인(34.6%), 이인영(12.6%) 의원을 크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 후보 측은 이같은 결과를 내세우며 '문재인 대세론'이 허물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리당원 대상 최고위원 적합도 조사(1순위)에서는 주승용 25.4%, 전병헌 21.0%, 정청래 12.1%, 유승희 6.9%, 이목희 6.6%, 문병호 의원 4.7%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대의원 19.8%, 권리당원 7.5%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우윤근, '개헌 연구' 오스트리아 방문 마치고 귀국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4박6일 일정의 오스트리아·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26일 오후 귀국했다.

개헌공부를 위해 이번에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우 원내대표는 베르너 아몬(Werner Amon) 한-오스트리아 친선협회장을 만나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와 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베르

너 제게르니츠(Werner Zogernitz)의 회민주주의문제연구소 소장, 칼 하인즈 코프(Werner Zogernitz) 국회 제2부의장 및 헌법위원회도 잇따라 면담하고 오스트리아 헌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분권형 권력구조를 혼



합한 형태의 개헌을 피력해 왔다.

이번 오스트리아 방문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경협·서영교 의원도 함께했다.

우 원내대표는 귀국 길에 러시아를 들렀다 왔다.

황주홍, 가축분뇨 관리·이용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한 벌칙을 3~4년 유예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호주·캐나다 FTA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가축분뇨법에는 무허가 축사에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해 사육을 위탁하는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고, 오는 3월25일부터 처벌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설치·운영자의 도산, 시설폐쇄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허가 축산농가의 벌칙 유예기간(일반농가 3년, 소규모 및 한센인촌 위탁사육 농가는



4년)과 동일하게 계열화사업자인 위탁사육자에게도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유예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황 의원은 "개정안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될 수 있게 신속한 법 통과와 농식품부를 비롯해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순 "중국 모자반 피해 양식어가 보상 해줘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지난 24일 "중국에서 떠밀려온 모자반으로 양식어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분명하다"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천해의 양식어장인 신안과 무안

해안에는 중국에서 떠밀려온 해초류 중 하나인 모자반 때문에 김·다시마·가두리 양식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부 담당자와 함께 모자반 피해를 입은 현지 어가와 양식장 방문 등 피해상황을 점검한 자리



서 이같이 지적하고 "모자반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거는 물론, 자연재해로 인종된 피해 어가에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지금 개헌 적기... 민주주의 위해 필요"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26일 "지금 개헌의 적기이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시·도민들과의 특별담화회에서 "한국정치의 파행이 시대에 맞지 않는 권력구조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살려낼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개헌이 정치권력 재편에 머물지 않고 시장의 공정성, 사법정의, 인권보장 등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김 전 지사를 초청해 전국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순회특강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사)광주전남자치분권연구소, (사)지역미래연구원, 자치분권광주전남연대가 주최했다.

김 전 지사는 "2·8전당대회를 통해 새



정치민주연합을 개혁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전당대회가 당의 지도부를 뽑는 이벤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새정연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광주시당, 박대통령 '경부선 인사' 강력 규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부선 인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3일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내각 인선은 그동안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온 대당평 인사가 대국민 립 서비스에 불과했음을 또 다시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주장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출신의 장관급 인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과 이번 청와대 수석 및 특보단 인사에서도 호남이 철저히 소외됐다"는 사실을 대

통령의 국민대통합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

통합엔 영남을 제외한 지방은 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엔 경부선뿐만 아니라 호남선, 중앙선, 영동선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면서 "이제라도 인사가 참사가 되지 않도록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당평 인사의 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정리컨설팅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1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전문컨설턴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손실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폐업 유도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

모집대상

○ (일반컨설턴트) 폐업예정자를 위한 사업정리컨설팅(폐업관련 신고사항, 점포정리절차, 폐업 시 점포전환, 신용불량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세무·회계컨설턴트) 폐업예정자를 위한 사업정리컨설팅(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신고 대행, 폐업·사업양도 등 사업정리의 절세방법 등)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수행내용

분야	지원 내용	업무수행
일반자문	· 사업정리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 각종 신고사항, 폐업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불이익 설명 · 재무상태 분석하여 차입금 상환 방법, 관련 정보 제공, 신용불량 예방 방법 · 시설, 재고물품 등 폐업 재산 처분관련 방법 · 기타 사업정리컨설팅관련 자문 및 안내	경영지도사 등 컨설턴트
세무회계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대행 · 폐업, 사업양도 등 사업정리의 절세방법, 관련 정보 제공 (잔존가액 및 부가가치세 계산 업무, 포괄 양수도계약 방법) · 기타 사업정리(세무·회계)관련 신고업무 대리	세무·회계사

* 지원분야(일반자문, 세무·회계) 중복신청 불가

자격요건

모집분야	모집자격	세부요건
일반자문	일반컨설턴트	·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 법무사·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1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컨설팅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자 · 경영지도사 등록증 소지(유효기간 내) 중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컨설팅 실적이 5건 이상 있는 자 · 사업정리업무와 연계된 기관(세무서, 국세청,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컨설팅 실적이 5건 이상 있는 자 · 법률, 세무, 회계, 경영학관련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중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건 이상 사업정리 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컨설턴트 경력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사업정리 컨설팅 실적이 7건 이상 있는 자
세무회계	세무사, 회계사	·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으로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 사업정리컨설팅 관련 실적은 폐업관련 각종 신고사항 및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폐업예정자 재무상태 분석 후 차입금 상환 방법, 신용불량 예방 방법 등 컨설팅 지원, 시설·재고물품 등 폐업 재산 처분 관련 방법 상담에 한함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공지사항 참조
 『201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정리컨설팅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
 ○ 접수방법: 광주호남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403호
 ○ 접수마감: '15. 2. 4(수) 18:00시까지 도착 및 24(수) 우체국 소인본 인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369-8755